

[9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고용정책 전환해야

2009.10.15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착시현상 일으키는 9월 고용동향
2. 정부의 결단 없다면 심각한 실업난 예상
3. 2010년 성장률에 따라오지 못할 고용
4.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확대 전략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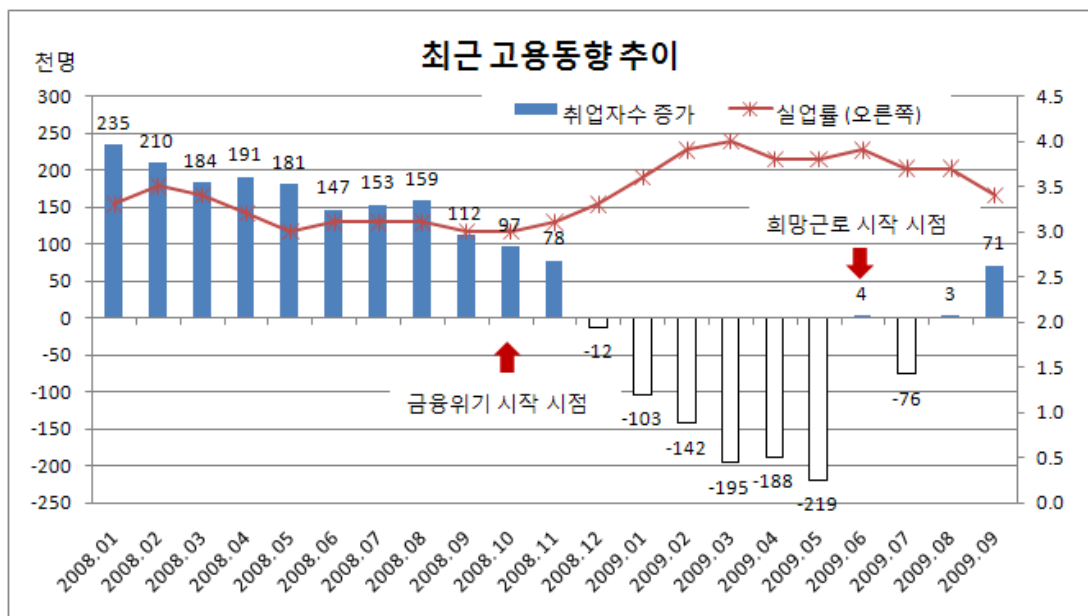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1. 착시현상 일으키는 9월 고용동향

9월 취업자 수가 7만 1000명 늘어났고 실업률은 3.4퍼센트로 떨어졌다. 작년 9월에는 미치지 않지만 수치로만 보면 거의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다.(그림 1 참조) 일부 언론에서는 1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라고 보도하며 암울했던 고용시장이 살아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정말 올 겨울부터는 취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고 미국 주가는 1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징후가 발견되지만 실상 고용만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미국 실업률이 9월에 9.8퍼센트로 진입하면서 10퍼센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경기회복의 최종적인 지표이자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이라는 지적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림 1>



그렇다면 한국은 일찌감치 올해 안에 고용지표까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정말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한 꺼풀을 벗겨내고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현재 고용만큼 겉으로 보이는 외형과 실속이 다른 경제 지표가 없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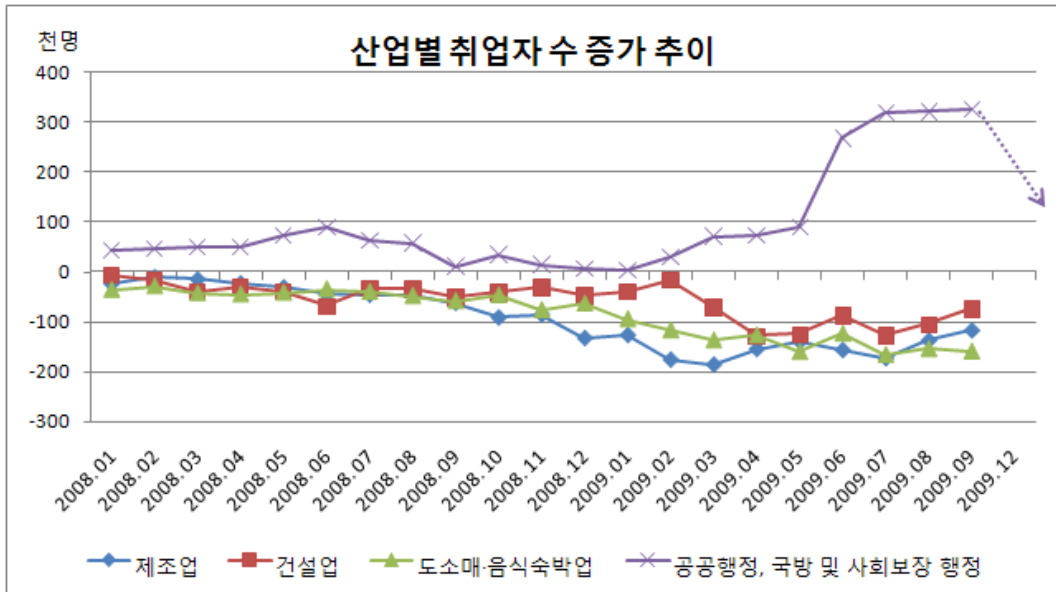
우선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한 요인들을 보면, 상용직이 전달에 비해 약 10만 명 정도 늘어났고 건설업에서도 3만 명, 제조업에서도 2만 명 정도 감소폭이 줄었다. 하반기 채용계절이 된 것도 일정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문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예년 수준이 아니지만 ‘9월 들어 삼성, 현대, GS, SK, 두산, 한화 등 대형 건설사들의 하반기 공채가 집중되면서 채용시장이 활기를 띤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 사례다.

거기다가 작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전 달에 비해 무려 5만 명 이상 취업자 증가가 감소했던 2008년 9월을 감안하면 2009년 9월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채용계절 분위기 탓에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취직 기회가 약간 확대된 데다가, 전년 같은 달 워낙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덕분에 기저효과가 발생하여 7만 명이라는 일자리 향상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의 결단 없다면 심각한 실업난 예상

사실 올해 6월 이후 정부의 희망근로 효과가 3분기(7,8,9월)까지 이어져서 8월 고용의 외형적 수치가 크게 악화되지 않음은 예고된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25만 명 규모의 희망 근로를 실시하여 고용 추락을 임시로 억제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추석을 앞둔 3분기까지인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 2009.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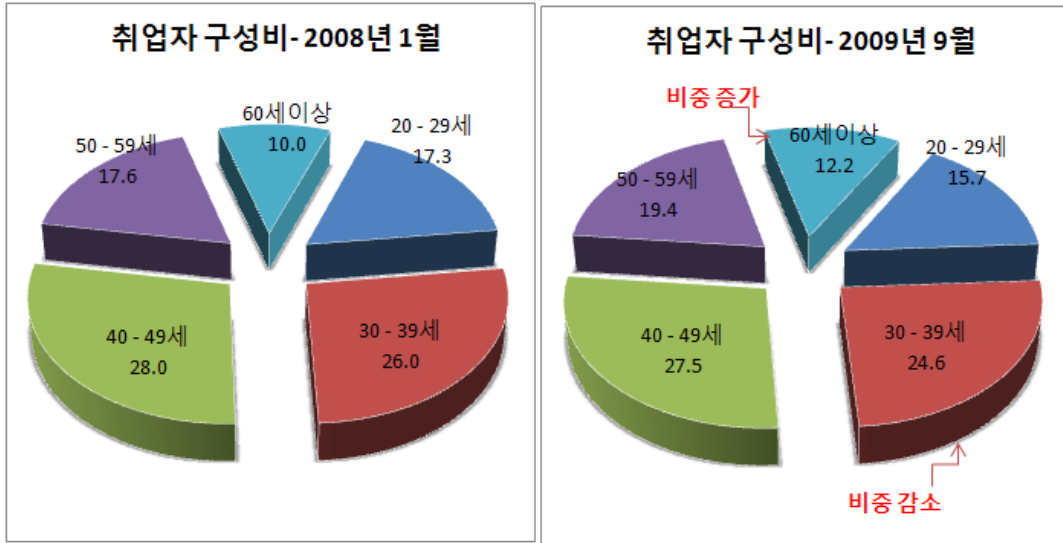
<그림 2>



통계청이 10월 14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 간단히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우선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약간 호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 전후(제조업 -11만 8000명, 건설업 -7만 5000명, 도소매 음식 숙박업 -15만 8000명)로,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 침체와 이를 보완하는 공공부문에서의 32만 6000명 증가라는 기형적 구조는 여전하다. 민간부문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단기 임시 일자리인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가 이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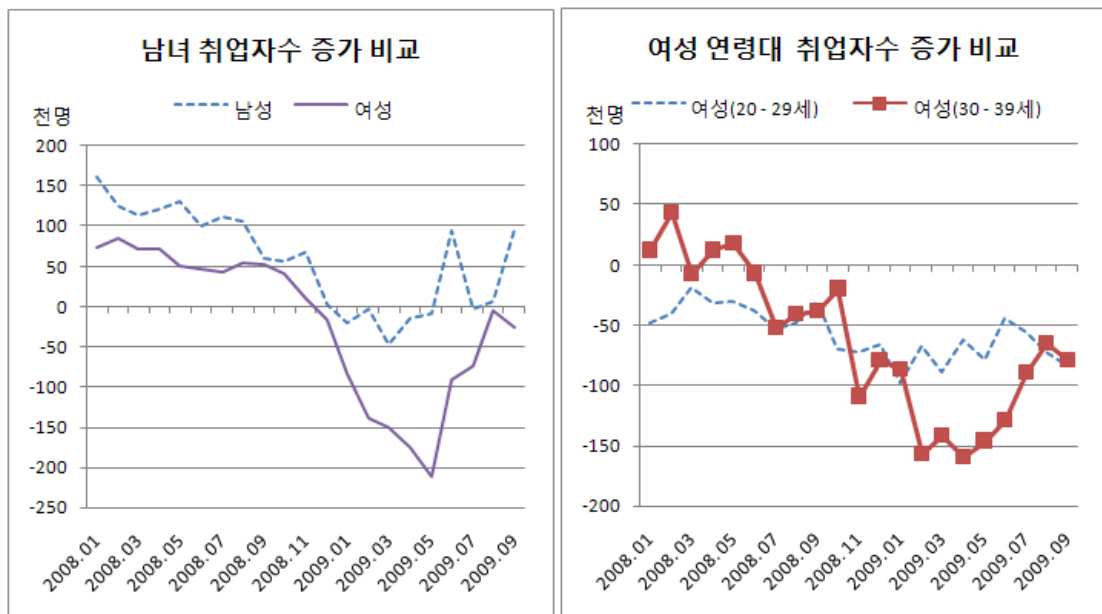
민간 부문에서 20, 30대 주력 노동 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공공 부문에서 고령층 임시 취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도 마찬가지다. 20, 30대에서 30만 명이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 35만 명이 증가했던 것이다. 이 영향으로 젊은층 백수(쉬었음)가 늘어나는 대신 60세 이상에서 '쉬었음'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집권 직전과 비교해서 50대 이상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퍼센트가 늘어났고, 반대로 20대, 30대 비중은 3퍼센트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취업자 고령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상용직은 늘었지만 일용직은 13만 4000명이 줄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 감소가 이제 -30만 명을 넘어서 -40만 명에 육박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유통산업 발전법 등의 적극적 개정의지를 미루고 기업형 슈퍼 입점 저지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동안 자영업은 이제 대책 자체가 없는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

<그림 4>



고용 취약계층 가운데 여성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7만 명 이상 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성 취업자의 경우다. 여성은 경제위기 이후 단 한 번도 취업자수 증가가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없다. 이번에도 여성은 2만 6000명이 감소했다. 8월의 4000명 감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20대 여성이 8만 4000명, 30대가 7만 9000명이 감소했다.(그림 4 참조) 여성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되면서 가사(4만 명 증가), 육아(10만 명 증가)가 늘어나고 있고 취업준비와 쉬고 있는 성인 여성도 증가하고 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고용 동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부부문의 인위적 단기 일자리 종료 시점에 맞추어서 사적 기업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적어도 9월까지의 추세를 보건데 여전히 이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7만 명 취업자가 늘고 실업률이 3.4퍼센트로 떨어졌다고 해도 반길 수 없는 이유다.

추석이 끝나고 10월부터 시작된 4분기부터는 정부가 떠받친 임시 단기 일자리 시한이 속속 종료되기 시작한다. 우선 노동부가 주관하여 3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10월 말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만15세~만29세(군필자 만30세)의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경우, 채용을 진행한 기업에게 인턴기간 6개월간 인턴생의 임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6개월간 기존 인턴생의 임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취업자 증가를 결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도 11월에 종료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규모를 줄여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20만 명에 가까운 희망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희망근로 용도로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금액이 올해 1조 3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400억 원으로 무려 66.4퍼센트가 줄었다. 3분의 2 가량의 희망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단기 임시 일자리가 지금 정도의 경제위기에서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여전히 민간이 대체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유일한 대안으로 결국 상당기간 동안 정부부문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늘리는 정책적 결단을 정부가 내릴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다.

3. 2010년 성장률에 따라오지 못할 고용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정부나 각종 민간기관에서 예측한 2010년 전망치가 워낙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어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따르더라도 내년부터는 경제 성장세에 비해 고용이 예년에 훨씬 떨어진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3년(2005~2007) 동안 경제성장률이 최대 5퍼센트 전후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평균 29~30만 명이 증가했다. 성장률 1퍼센트 당 6만 명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2010년에는 경제 성장률을 4퍼센트로 예측하고 있는데 일자리 증가는 10~15만 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0년 한국경제 전망지표 읽기’, 2009.9.26). 2008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이다. (반면 이 기간 2년 동안 새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대략 1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1퍼센트 성장률이 높아져도 3~4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단순한 비교이기는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증가 잠재력이 과거보다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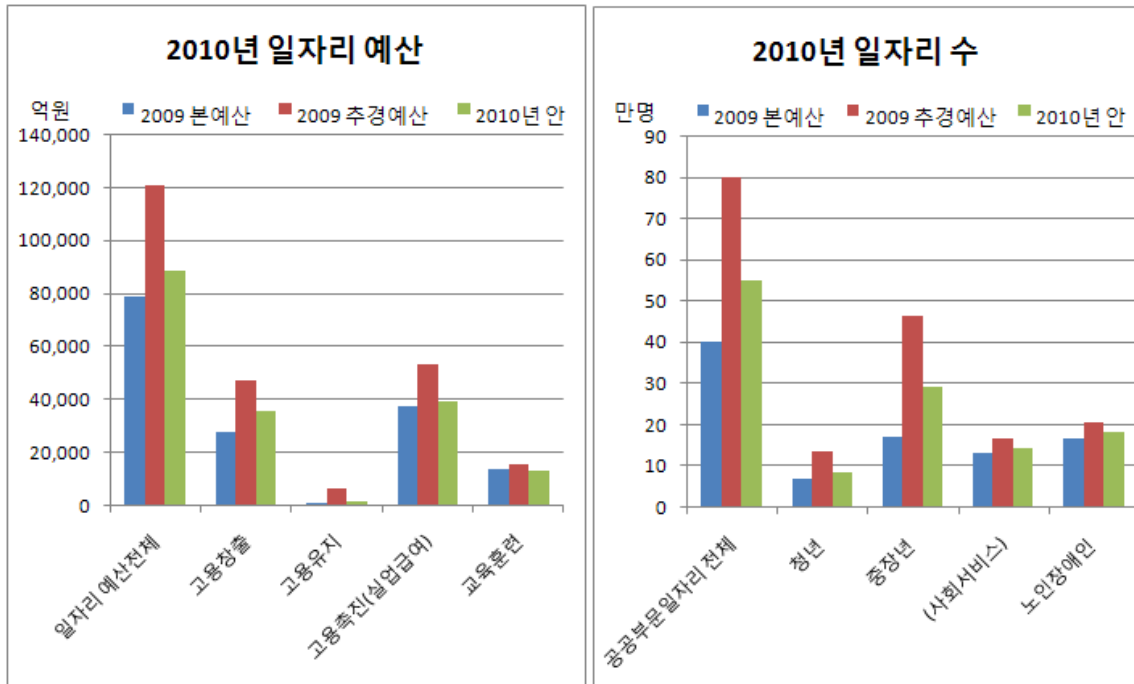
4.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확대 전략이 필수

더 이상 임시적인 단기 일자리로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특단의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고용관련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이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이하 내년 고용예산 분석은 김유선,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 2009.10).

고용회복이 더딜 것이고 그나마 경제가 성장해도 예년 수준의 일자리 증가가 어려울 것이라면, 적어도 고용관련 분야의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7.1퍼센트나 줄어들었다(김유선 위의 글에서 인용).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노동자와 기업이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이고 정부의 일반 회계는 10분의 1 수준이지만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일반 회계를 그나마 줄였다. 2009년 1조 2800억 원에서 1조 900억 원으로 깎은 것이다. (그림 5 참

조)

<그림 5>



정부의 발상전환이 절박한 대목이다. 물론 이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당장 필요도 없는 공공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 것인가?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십 번도 넘게 공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분야의 일자리야말로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서비스 산업 구조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위기의 시점에서 평상시에는 하기 어려운 서비스 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다. 심지어 공기업들이 이미 채용한 청년 인턴들을 앞장서서 잘라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정규직을 채용할 재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4대강 사업으로 22조 원이 투입된다. 2010년에만 6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4대강 사업비의 3분의 1만 있어도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공공부문 직장인 10만 명을 채용해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내내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채용된 10만 명은 더 이상 고용보험 기금을 잠식할 이유가 없어지고, 세금 납부와 소비를 할 것이고 그 결과 일부는 국가 채정으로, 일부는 기업 경기 활성화로 환류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왜 불가능하겠는가?

